

도로 검찰청? ...중수청 법안 우려 목소리 높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로 기존 검찰 조직과 다를 바 없어
지역사회·법조계 “개혁 취지 무색...검찰 수사권 명백히 분리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개한 검찰 개혁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소청법 세부계획을 두고 “도로 검찰청을 신설하는 꼴”이라는 지역사회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수청 내에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 “기존 검찰과 다를 게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가 무색하다”, “사법관과 수사관 간 위계와 갈등만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수사 범위를 크게 넓힌 것도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중수청 법안에는 내부 조직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을 뒤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수처 사건만은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안부장관에게 맡기기로 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업무만 전담토록 규정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놓고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로 검찰청”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가 기존 검사, 검찰수사관으로 나누는 검찰청 내부 직급 체계와 똑같아 사실상 검찰 조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냐 다름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 출신 중심의 수사사법관이 경찰 중심의 전문수사관에 수사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운영돼 위계가 생기고,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취지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긴커녕 기존 검찰의 구조를 이룸만 바꿔 유지시키는 형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조차 무색해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 원칙에 충실하게 수사권을 명백히 분리해 다시 법안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도 “검찰 조직을 톨로 나누긴 했지만, 수사사법관 자리를 검사 출신들이 메우게 되면 검찰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냐 다름없다”며 “수사관 입장에서는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 위계질서가 생기면서 오히려 갈등이 불거지고 수사 역량도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개혁이라기보다 ‘반(反)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검찰의 특권을 하나도 못 없애 법안이다. 법률가 출신으로 중수청 수사사법관을 꾸리면 결국 검사 중심의 수사 지휘 체계가 이어지고 검찰의 영향력도 유지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권한을 연결해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던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 수사관 조정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번 입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재 특검보는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무한 변명”이라며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2일 내려진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운동하며 추위 이겨요”

낮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예약 미리 받아놓고...돌연 개관 취소한 결혼식장

광주 북구 ‘메리포엠 침단 웨딩홀’

4월 오픈 앞두고 용도 변경 차질

예비부부 350여명 피해 호소

업체 “예약 승계 등 피해 최소화”

광주시 북구에 조성될 예정이던 예식장 ‘메리포엠 침단 웨딩홀’이 예정된 개관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개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계약을 맺은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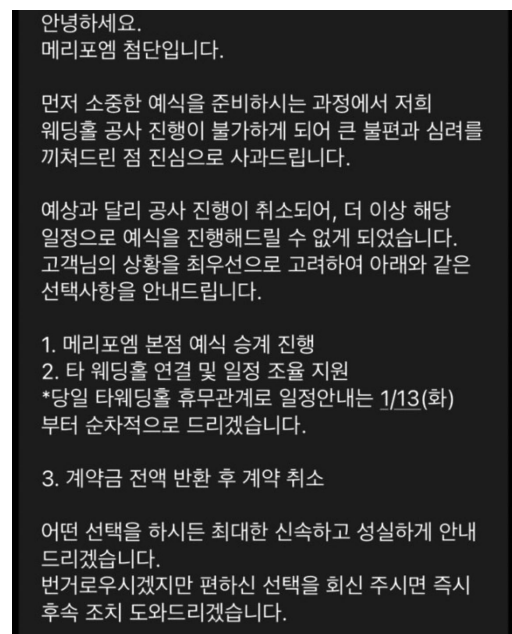
예식장 업체 측이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약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식 일정 차질과 각종 위약금 부담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업체 갑질 계약서? 위약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오는 4월 신규 오픈 예정이었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11일 예식장 오픈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예식장 개관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표가 정상 개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취소 연락을 받게됐다”고 토로했다.

업체 측이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공사 진행이 취소돼 더 이상 해당 일정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포엠 침단 웨딩홀 측이 지난 11일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네이버 블로그 캡처>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메리포엠 침단 웨딩홀은 오는 4월 광주시 북구 연제동 광주침단과학국가산업단지 2지구 내 한 건물에서 들어설 예정이었다. 업체 측은 오는 4월 4일 첫 예식을 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왔다.

업체 측은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는 건물에 예식장을 조성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지난해 10월 27일 북구에 용도 변경

을 신청했으나, 북구는 법령 검토를 거쳐 건물 내 입주 기업 간 결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돌연 공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예약 예약을 했던 예비부부들이 모인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현재 350여명이 모여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예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이미 계약을 마친 신혼여행과 웨딩 스냅 촬영, 청첩장 제작 등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잇달아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예식장에서 오는 9월 결혼식을 열기로 계약을 맺었던 이승규(31)씨는 “계약 당시 행정 절차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공사 취소 역시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해 다른 예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다”며 “결혼식부터 스냅 촬영, 신혼여행 일정까지 전면 수정해야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업체 측은 대안으로 자사가 운영 중인 예식장으로 이전해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타 업체 예식장으로 유사한 조건에 이전하는 방안, 계약금 전액 반환 및 계약 취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 업체 예식장으로의 이전 지원은 올해 예약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마저도 봉사비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보에는 업체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예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대표와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